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10. 24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3년 10월 10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9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0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-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- 개인정보 보호원칙, 구청장의 책무 (안 제4조, 제5조)
-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(안 제6조)
- 파일 등록·유출·과기(안 제7조~제9조)
- 수수료 청구 및 납부, 이의신청(안 제10조, 제11조)
- 개인정보보호 심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)
- 개인정보 취급자 감독(안 제14조)
- 보험·공제 등의 가입(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(적용범위)에서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영등포구 소속 행정기관과 영등포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으로 규정함.
 - 안 제4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조에 근거한 규정으로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으로서 처리 목적의 명확화, 최소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, 목적 외 활용 금지,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, 안 제6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)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단 및 출자·출연 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함.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32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)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요건으로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'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'으로, 공공기관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'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임원'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8조(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대책)제1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4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유출 경위 및 대응 조치 등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0조에 근거하여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이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강제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.
 - 안 제9조(개인정보의 파기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1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함.
 - 안 제10조(수수료 청구 및 납부)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. 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7조에서 개인정보 열람 등에 따

- 른 수수료 등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임.
-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안 제11조에 규정된 이의신청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.
- 안 제14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8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, 자율주행차 등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‘데이터’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‘데이터’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처리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‘정보’,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는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수록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.
-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음.
-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,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2023년 3월에 개정되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.
- 본 안건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「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」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례안으로서,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0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개인정보 보호원칙, 구청장의 책무 (안 제4조, 제5조)
- 다.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(안 제6조)
- 라. 파일 등록·유출·파기(안 제7조~제9조)
- 마. 수수료 청구 및 납부, 이의신청(안 제10조, 제11조)
- 바. 개인정보보호 심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)
- 사. 개인정보 취급자 감독(안 제14조)
- 아. 보험·공제 등의 가입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3. 8. 31.~ 9. 20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행정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구가 설립한 공단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가 출자·출연한 기관으로 한다.

제4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,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, 오용·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·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)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.

1. 구 소속 행정기관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

가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: 부구청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소관 국장

나.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: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장

다. 영상정보 관리책임자: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장

2. 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. 이 경우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가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: 상임이사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할 부서장

나.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, 영상정보 관리책임자: 공단 또는 출자·출연기관
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
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.

제7조(개인정보파일 등록) 구청장은 **법 제32조**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**법 제7조**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(이하 “보호위원회”라 한다)에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8조(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) ① 구청장은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

1.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
2.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
3.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
4. 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
5.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

②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또한,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중에 따라 “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센터”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,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보호위원

회 또는 전문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장은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,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(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거가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,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제10조(수수료 청구 및 납부)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(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)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,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·삭제의 요구,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(이하 “열람 등 요구”라 한다)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.

② 구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.

제11조(이의신청) ①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·자문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심의·자문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11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
2.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1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개인정보 보호책임자, 감사 및 조사업무 담당 부서장,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
2. 위촉직 위원: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외부전문가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

수 있도록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이하 “개인정보취급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보험·공제 등의 가입)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